

기출은 미래다! 10년간 기출을 완벽 정제한

필수전환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완벽 반영

2024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01 총론 · 정책



이공이사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9·7급 통합)을 펴내며

기출은 미래다, 행정학 기출혁명

행정학에서 기출문제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기출문제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대한 행정학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고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학 커리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2024 기출문제 선행정학은 합격생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24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의 특징이자 강점은

첫째, 9·7급 등 모든 공무원 행정학을 위한 통합 기출집입니다.

여러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급, 7급, 국회, 경찰, 군무원, 공사·공단 등 다양한 행정학 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각종 기출문제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제·분석·수록하여 기본서 체제에 맞추어 통합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3권으로 분권 출간하였습니다.

둘째, 가독성을 한 층 높였습니다.

종래 2도였던 것을 4도(컬러)로 전환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이고, 해설 부분 키워드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핵심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문제를 엄선·정제하였습니다.

최근 10여년간의 2,000여 문제를 엄선·정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성이 없어졌거나, 중복되거나, 재출제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재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만 엄격히 정제하여 최종 2,000여 문제(유제 100, 7급용 100 포함)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연결이나 흐름상 공백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며, 단 한 문제도 빠져 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쳤습니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분량이 약간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퀄리티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넷째,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이론과 정리표를 등을 배치함으로써 이론단계에서 이해 못한 부분들을 기출단계에서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기출문제와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출제 당시와 달라진 제도 개편, 최근 법령개정(「정부조직법」,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방자치법」 등)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의 적절히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재시생들을 위하여 종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뿐 아니라 최근 공기업이나 군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일부 수록하고 최근에 치러진 2023 국가9급, 지방9급 문제까지도 모두 분석·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출은 최근 문제가 중요하므로 최근 1년 간 문제에는 기출이력을 별도의 색상으로 강조·표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추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2023.6.7. 시행)과 「공무원노조법」(2023.12.11. 시행)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들 개정내용은 행정학 수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100% 전 지문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과 정리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쾌하게 수록하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틀린 지문은 물론, 옳은 지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설을 제시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지문이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특히 대충 정답에만 꿰맞춘 듯한 성의 없는 해설로 일관된 시중의 다른 교재들과 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논란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승부하였으며, 잘못된 해설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카스파(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계 시판에 올라온 질문 글들을 바탕으로 다른 교재의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바로잡아주는 개방적이고도 과감한 해설을 시도하였습니다. 행정학의 필수과목화에 대비한 고득점전략을 위해서 해설의 폭과 깊이를 한층 보강한 것입니다.

여덟째, 정답을 찾아가는 경로와 암기법을 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하거나 자주 틀리거나 빈번하게 질문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답 제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과 경로를 알려주어 실수하지 않고 패턴별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중규쌤팁”란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수업때 강조했던 암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는 암기법^善까지도 표기해두었습니다.

아홉째, 합격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정학 교재로 공부해온 합격생들이 아쉬워 했던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합격생들이 문제를 풀어갔던 과정이나 아이디어를 수험생 눈높이에 맞추어 합격생 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열번째, 빈출되는 유사·중복 문제는 유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유사·중복되는 문제라도 논점이 약간 다르거나 빈출되는 중요한 문제는 버리지 않고, 관련 문제 아래에 유제 형식으로 처리하여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문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기본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침삭 형식으로 보충설명을 곁들여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기출집이 기본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강조하였습니다.

고득점의 여부를 결정짓는 헛갈리거나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문제 하단에 눈에 잘 띄게 주의형식으로 처리하여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최근 높아진 난도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9급 필수과목 전환과 7급 PAST 도입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마다 난이도와 중요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경중을 가려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난이도와 중요도는 다릅니다. 중요도는 앞으로 재출제가능성 등을 감안한 문제의 중요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도이고, 난이도는 해당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실력이나 기술, 틀리는 빈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들로 하여금 흔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중요한 문제보다 자주 틀리는 문제(난도 높은 문제)에 치중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난이도보다 중요도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주 틀리는 문제(중요하지 않은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위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확은 합격생들과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분량과 편철, 편집형식, 수록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4 기출집 원고 교정에 열과 성을 다해준 고마운 제자·조교들(은신, 유리, 유빈, 소정, 효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정성에 정성을 다한 이공이사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확으로 행정학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4 기출문제 선행정확은 그동안 힘든 치료를 견디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막내딸 해나(채원)의 쾌유를 응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습니다.

책은 쓰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이고, 책을 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믿음이 사라진 사회이긴 하지만 수험서까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험생의 1분 1초를 아껴주는 정성과 마음을 만나보세요.

2023.6.26.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들어보고 실망않는 강의, 김중규 선행정학

수많은 시간과 진지한 고민이 녹아들어난 교재 - 2019 국가직7급 합격생 김은선

저는 합격후 김중규 교수님 곁에서 기출문제집이 출간되는 과정을 4번째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질문게시판에 녹아있는 수험생들의 수많은 고민과 질문에 좀 더 쉽고 명쾌하게 다가가고자 교수님과 조교들이 한데 모여 문제 해설을 고민한 후 그렇게 정제된 해설들을 다시 엄선하고 다듬어 기출문제집에 신습니다. 모든 교재란 출간되고 나면 늘 아쉬운 점이 남지만, 이번 2024 기출집교재도 교수님과 관계자분들, 조교분들의 수많은 시간과 진지한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난 교재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이론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설과 이론이 모두 꼼꼼한 '선행정학 기출문제집'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수님의 기출강의를 함께 수강하시면서 이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간다면, 막연했던 행정학이 해볼 만한 과목, 그리고 자신있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행정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선행정학 기출문제집으로! - 2022 국가직9급, 지방직9급, 서울시7급 합격생

김중규 교수님의 커리를 타면서 행정학은 기출문제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메인인 필수 강의라고 익히 들었기에 처음부터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공부한 후 반복해서 회독하였습니다.

선행정학 기출문제집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상세한 해설과 풍부한 보충설명들을 통해 기출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강의 중 문제에 연관된 사항들이나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 표현 등을 많이 짚어주셔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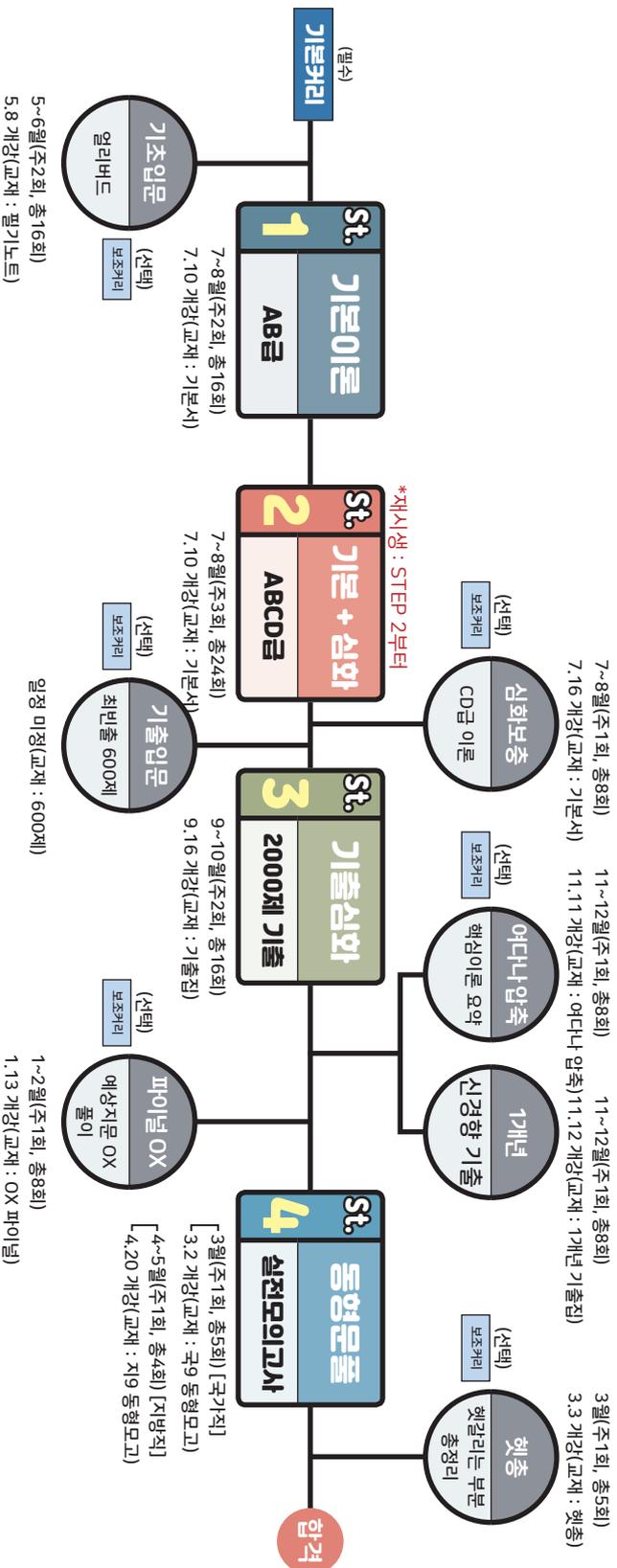
많이들 기출 문제 회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것은 합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맞는 문제는 넘어가고 틀린문제만 해설 한 번 보고 넘어가는 이러한 회독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회독의 속도는 느리더라도 선지 하나하나를 스스로 해설해보며 자신이 부족한 파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제대로 된 회독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선지를 분석하며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표 세부적인 내용과 작은 첨삭 글씨까지 모두 익히는 노력을 통해 행정학 실력을 쌓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밀도있는 기출공부를 통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방대한 행정학의 세계에서 나침반이 되어준 선행정학 - 2022 지방직9급, 2023 국회직8급 합격생 노효준

작년 지방직 9급에 합격하고 저는 망설임없이 Next Step으로 국회직 8급을 위해 또 다시 선행정학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험에 입문하고 기본서 강의를 들 때만 해도 행정학에 대해 감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그 다음 기출 강의를 들 때부터 행정학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선행정학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행정학의 모든 커리를 다 봤지만 그 중 선행정학의 저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기출집과 여다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라 워낙 범위가 넓어 처음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 자체가 잡히지 않지만 그냥 선행정학의 커리를 차근차근 밟으면 어느 순간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효자과목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기출집은 선행정학의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록된 문제의 양이 충분하고 방대한 만큼 탄탄한 방어를 할 수 있고, 해설 아래에 관련된 개념이 정리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3회독을 할 때 쯤에는 표를 보시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외엔 아예 보지 않았을 정도로 7급, 국회직8급에도 충분할만큼 공부가 가능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선행정학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가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합격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

2024 신입생 학 커리



Ch.01

행정학의 기초이론

- 제1절 행정의 본질
- 제2절 행정과 환경
- 제3절 행정의 변천
-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 제8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Ch.02

정책론

-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제4절 정책결정
- 제5절 정책집행
- 제6절 기획
- 제7절 정책평과와 환류

Ch.03

조직론

- 제1절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 제2절 조직행동론
- 제3절 조직구조론
- 제4절 조직환경론
- 제5절 조직관리론

Ch.04

인사행정론

-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제2절 공직의 분류
- 제3절 공무원의 임용
-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 제6절 공직 윤리와 부패

Ch.05

재무행정론

-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 제2절 예산의 종류
- 제3절 예산결정이론
- 제4절 예산제도론
- 제5절 예산과정

Ch.06

행정환류와 정보화

- 제1절 행정책임
- 제2절 행정개혁
- 제3절 정보화와 행정

Ch.07

지방자치론

-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02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군무원7급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아이디어들로 묶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ㄱ. 총체적 정부 또는 연계형 정부
- ㄴ.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 ㄷ.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 ㄹ.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 ㅁ.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ㅂ.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 ① ㄱ, ㄴ, ㄷ, ㅂ
- ② ㄴ, ㄷ, ㄹ, ㅁ
- ③ ㄱ, ㄷ, ㅁ, ㅂ
- ④ ㄷ, ㄹ, ㅁ, ㅂ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누적된 비판으로 탈신공공관리론에 관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에 포함될 수 있는 공공가치관리론, 넛지이론 등 신이론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4 선행정학 p.173

정답·해설

답 ③

ㄱ, ㄷ, ㅁ, ㅂ만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맞고 ㄴ, ㄹ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ㄱ, ㄷ, ㅁ, ㅂ [o]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ㄴ [x] 정부실패를 문제삼으며 민영화를 주장한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ㄹ [x] 행정을 관리(경영)로 보고 시장의 경쟁의 원리나 가격원리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03 중요도 ■■■□ 난이도 ■■■■

2022 지방7급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파일별 특강 때 중급생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이슈라며 강조해 주셔서 쉽게 풀었어요.



행정학의 새로운 핫이슈로 떠오른 넛지이론이 드디어 예상대로 출제되었는데 당분간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 선행정학 p.176

정답·해설

답 ④

ㄱ, ㄴ, ㄷ 모두 옳다. 넛지이론은 탈신공공관리론의 일환으로 시장에 대한 부드러운 개입주의자로서의 정부역할을 중시한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전통적인 행정국가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신공공관리론 모두를 경계한다.

☑ ㄱ [o] 넛지이론은 선택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의 선택설계를 의미한다.

ㄴ [o] 넛지는 정책대상집단에게 도덕적 설득, 경제적 유인, 강압적 규제 등을 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을 통해 구성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다.

ㄷ [o] 넛지이론은 디폴트 옵션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정부(관료)는 선택설계자가 된다.

15 중요도 ■■■ □ 난이도 ■■■ □

2016 교행9급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유제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복9급 등 총2회

- ①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2024 선행정학 p.167

정답 · 해설

답 ② 유제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정부관료제)**를 포함하여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 ☑ ① [○] 신행정론의 지향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 NPM은 정부의 일방적 · 독점적 통치를 거부하고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 ④ [○] NPS는 효율보다는 시민과의 소통과 담론 등을 중시하는 시민중심의 이론이다.

16 중요도 ■■■ □ 난이도 ■■■ ■

2020 군무원7급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2024 선행정학 p.164

정답 · 해설

답 ②

고난도 문제이다.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이란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비판적 · 적극적 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1990년대 행정운동으로 단순히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과는 그 배경과 논점이 다소 다르다.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행정은 경영과 속성이 유사하다는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비판적 · 적극적 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움직이는 소극적인 역할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1990년대 중반의 새로운 행정운동을 말한다.

- ☑ ① [×] 1980년대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1990년대 **정부재창조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2000년대 **신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강조했다.
- ② 사이먼(Simon)은 인간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고 행정이론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 ④ 미국행정학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국어 팁
 국가의지(국가의사)를 표명(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고, 실천(집행)하는 것은 행정입니다. 이 둘 개념을 구분하면 이원론, 구분하지 않으면 일원론입니다.

2024 선행정학 p.4

정부역할의 재정립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정부불신으로 신자유주의 기조속에서 정치행정이원론 재등장
	전문직업주의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증가 ⇒ 업관주의 부활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 및 직업관료제의 역할 강조 ⇒ 행정재정립운동의 토대
1990년대	행정재정립론	①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 등장 ② 스바라(Svara) :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비판적 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정부재창조론	① 오스본 & 게블러는 정부재발견보다는 정부재창조 강조 ② Clinton행정부의 기업형 정부 개혁기반 : NPM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 강조
2000년대	뉴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의한 민관협치
	신공공서비스	고객중심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적 한계 극복 경향

정답 · 해설 답 ③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한 사람은 굿노우(Goodnow)이다. 애플비(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책(정치)과 행정은 분리가 아니라 융합적·정합적·연속적 관계라고 강조하였다.

- ☑ ① [○] 신행정학 운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으며 전문직업주의, 가치중립적인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해 분권화, 고객에 의한 통제,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 ② [○] Simon은 경험적 입장을 취하면서 행정연구의 초점을 합리적 의사결정에 두고 행정이론의 과학화에 주력하였다.
- ④ [○] 미국 행정학은 정치학에 뿌리를 둔 행정이론과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뿌리를 둔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25 중요도 난이도

2013 지방7급 등 총3회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책임성에는 두 가지 의미(민주적 책임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가 있으니 잘 보세요.

2024 선행정학 p.162

정답 · 해설

답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 할 뿐 **민주주의나 책임성을 희생시킬 수 있다.**

- ① [○] 사적목표의 설정(내부성)은 정부실패의 요인
- ② [○]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등 시장논리에 의한 정부실패 해결 시도
- ③ [○] 뉴거버넌스는 민관협치(공동생산)에 의한 정부실패 해결 시도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차이

구분	구제도론	신제도론
개념	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공유하는 규범, 규칙, 균형점
형성	외생적 · 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
특성	공식적 · 구체적 · 정태적 · 보편적 · 유형적	비공식적 · 상징적 · 동태적 · 무형적
접근	거시주의	거시(제도)와 미시(인간)의 연계
초점	제도의 기술 자체	제도를 통해 인간 행위, 정책 설명
범위	인간행위, 정책, 사회현상 불포함	인간행위, 정책, 사회현상 포함

NPA, PCM, NPM, GOV & NPS 비교

	NPA (신행정론)	PCM (공공선택론)	NPM (신공공관리론)	GOV (거버넌스론)	NPS (신공공서비스론)	
국가의 역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	국가의 역할 대폭 축소 · 부정 ⇨ 시장으로 전환	국가의 역할 대폭 축소는 아님 ⇨ 시장 원리로 정부를 개혁하여 효율성 제고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해결 ⇨ 공동생산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봉사와 서비스 ⇨ NPA의 계승	
방향잡기 & 노ذج기	구분 X	구분 X	방향잡기 O (정부) 노ذج기 X ⇨ 시장	방향잡기 O (정부) 노ذج기 Δ : 함께(공동)	구분 X (불가능) * 정부가 모두	
행 정 이 념	효율성	X	O	Δ ¹⁾	-	
	대응성	O	O (주민들의 선호)	X	O	
	민주성	O	Δ (Ostrom)	X	O (민주적 행동)	
	형평성	O	X	X	-	O (약자 배려)
	공익성	O	X	X (과정설)	-	O (실체설, 궁극목표)
책임성	O	X	Δ ²⁾	Δ ³⁾	O (다면, 복잡)	

1) 거버넌스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소홀히 하지만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에 대한 책임은 강조하나, 대국민 · 민주적 · 공공책임성은 약화된다.

3) 거버넌스는 대국민 · 민주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공동생산에 의한 모두의 책임은 모두의 무책임(분절화)으로 이어져 선거직을 통한 책임 확보라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책임주체의 소멸 위기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우리나라 정부조직 실무에 대한 문제가 최근 빈출되고 있습니다.

2024 선행정학 p.403

정답·해설

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에 해당하고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지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 ② [○]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
- ③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30여 개 부처 산하 5600여 개가 있다.
- ④ [○] 계선의 하부조직은 보조기관이고, 참모조직은 보좌기관이다.
- 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관청의 성격을 띠는 행정위원회이다.

2016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2024 선행정학 p.399

정답·해설

답 ④

①②③은 문재인정부 들어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내용으로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2018.6. 물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종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수량관리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홍수통제·조절기능 등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 ① [○]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2017.5).
- ② [○] 국민안전처의 폐지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각각 분리·독립 되었다(2017.5).
- ③ [○] 문재인정부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2017.5.) 그후 국가보훈처는 윤석열정부 들어 2023.6.5. 국가보훈부로 다시 격상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내용

17부 5처 14청 4위원회 → 18부 4처 18청 6위원회

- 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② 국민안전처 폐지
- ③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 ④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분리·독립 : 해경청은 해수부,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외청
- ⑤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 ⑥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 ⑦ 물관리기능(홍수조절 등 수자원관리)을 환경부로 일원화
- ⑧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화
- ⑨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 신설 및 복수차관제 도입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내용

18부 4처 18청 6위원회 → 19부 3처 19청 6위원회

- ①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 ②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

03

중요도 ■■■ 난이도 ■■■□

2017 복지9급 등 총5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공공기관

유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018 군무원

-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 ② 공기업은 다시 자체수입의 비중 등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 ④ 공공기관은 매년 국무총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출제분석

최근 공기업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빈출되고 있다.

2024 선행정학 p.409

정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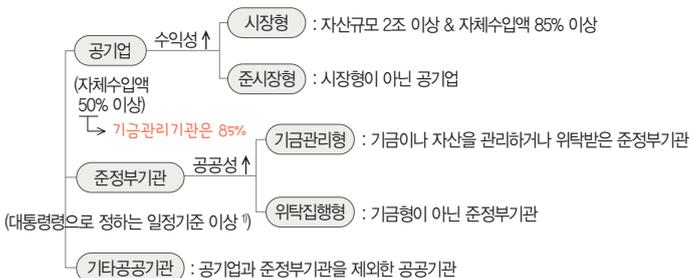
답 ③ 유제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 ①②④ [○] 모두 공공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공준가-기준-기위



1) 2023.1.1. 부터는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정수자-323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고시

04

중요도 ■■■ 난이도 ■■■□

2019 국회8급 등 총4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2024 선행정학 p.409

정답·해설

답 ④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 정부의 공적사무를 대리인자격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 ☑ ① [×]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기관의 성격도 정부조직이고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 ② [×]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 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그 중 공기업은 시장성이 커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주의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 KBS, EBS
- 자치단체가 설립·관여하는 기관
- 상호부조기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 다.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 라.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마.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 바.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 ① 가, 다, 마
- ② 나, 라, 마
- ③ 나, 라, 바
- ④ 다, 라, 마

2024 선행정학 p.542

정답 · 해설

답 ②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나, 라, 마만 옳다.

- 가 [×] 2016년 1월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재직 기간 10년 이상(종래에는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로 바뀌었다(퇴직연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 중이다).
- 나 [o]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인상되었다.
- 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에서 160%로 하향조정되었다.
- 라 [o]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정부 기금제와 공무원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마 [o] 유족연금 적용률은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되었다.
- 바 [×]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2035년 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법 개정 - 2016.1.1. 시행)

	종전	개편 후
기여율	기준소득월액의 7%	9% ¹⁾
지급율	기준소득월액의 2) 1.9%	1.7% ³⁾
지급개시 연령	만60세	만65세 ⁴⁾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의 70%	60% ⁵⁾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36년 ⁶⁾
연금수령조건	가입기간 20년	10년 ⁷⁾
퇴직수당	민간의 39%	
기준수급자 연금액 ⁸⁾	물가에 연동지급	향후 5년간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0%	전체 공무원 평균의 160%
연금소득재분배제	-	도입 ⁹⁾

- 1) 기여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2)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 3)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
- 4)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 5)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축소 · 통일
- 6) 기여금 납부상한기간 3년 연장
- 7)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
- 8) 퇴직수당의 재원은 퇴직연금과 달리 정부 단독부담
- 9) 최근 3년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률 가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변천

연대	기여율 부담율	연금 지급율	지급 개시연령	지급기준소득	기타
1960	2.3%	30~50%	60세	퇴직당시 최종보수월액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2			폐지 ¹⁾		
1989	5.5%	최대 76% ²⁾			
1993	7.5%		60세 ³⁾		
1997	8.5%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	
2010	7%	1.9%	60세, 65세 ⁴⁾	총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⁵⁾	
2016	9%	1.7%	65세 ⁶⁾		소득재분배제 도입 ⁷⁾

- 1) 연령에 관계없이 20년이상 재직하면 퇴직시 바로 지급
- 2) 재직기간 33년 기준
- 3)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재도입(60세)
- 4) 2010년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이후 신규임용자는 65세
- 5) 지급기준소득 변경(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율 · 지급율 조정
- 6)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5세로 단계적 통일
- 7) 본인 총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전체공무원 최근3년평균 기준소득월액 대비하여 재분배

03 중요도 ■■■ 난이도 ■■■

2017 국가7급 인사조직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선행정학 p.552

정답 · 해설

답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① [×]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② [×] 현행법상(2023.12.11. 이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2022.6.10. 「공무원노조법」 개정(2023.12.11. 시행)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3.12.11.부터는 근무시간면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는 여전히 무급휴직이 원칙이다. 단, 국가는 노조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보수지급금지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틀린 지문이다.
- ③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의 [노조전임자 등의 급여(2023.12.11. 시행)]

- 노조전임자 : 무급, 휴직 O
- 근무시간면제자 : 유급, 휴직 X

→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보수 손실 없이 노조업무 수행 가능

04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국가7급 등 총2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9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③ 단체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 ④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2021.7.6.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 가입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주의하세요.

2024 선행정학 p.551

정답 · 해설

답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국공립교사 등)인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①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종래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특정직(외무직)만 가입대상이었으나 「공무원노조법」 개정(2021.7.6.시행)으로 현재는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소방, 외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 직장협의회 또한 2022.10.27. 법 개정으로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으로 확대되었다. → 교원 제외
- ② [○]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노조는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방지하여 실적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시각이다.
- ③ [○] 보수·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11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가7급 인사조직론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 ②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 ③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실적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공무원 노조 활동의 전임자를 인정하지만, 무급 휴직이다.

2024 선행정학 p.551

정답 · 해설

답 ④

현행법상(2023.12.11. 이전까지)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동안 국가나 자치단체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무급휴직이다. 다만, 2022.6.10. 「공무원노조법」 개정(2023.12.11. 시행)으로 2023.12.11.부터는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 근무시간면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조전임자는 여전히 무급휴직이 원칙이다. 단, 보수지급금지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노동조합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 ① [×] 최근(2021.7.6.)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6급이하 뿐 아니라 직급 제한 없이 전 직급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휘·감독·총괄 공무원, 보수·인사 및 노동관계 조정·감독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안녕·국가안보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 미국도 10여개 주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③ [×] 공무원노조는 실적주의를 저해한다는 입장(전통적 입장)과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는 긍정적 입장(현대적 입장)이 대립된다.

12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국회9급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② 공직의 특수성에 비취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구의 하나이다.
- ④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다.
- 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규가 많고 그러한 법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2024 선행정학 p.549

정답 · 해설

답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제의 강화 및 직업윤리 확립기능을 수행한다. 실적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 왔으며, 공무원노조가 실적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은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상호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실적제가 강화되고 있어 공무원노조가 인사권의 제약을 초래하여 실적제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 ②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조(우정노조 등)는 가능하다.
- ③ [○]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종래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특정직(외무직)만 가입대상이었으나 「공무원노조법」 개정(2021.7.6.시행)으로 현재는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소방, 외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고, 직장협의회도 2022.10.27. 법 개정으로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으로 확대되었다.
- ⑤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노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우정노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직공무원노조 등 상이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노조가 존재한다.

01 중요도 □□□ 난이도 □□□

2017 지방9급 등 총3회

양곡, 조달, 우편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산관련 법률은?

- ① 「국가재정법」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④ 「정부기업예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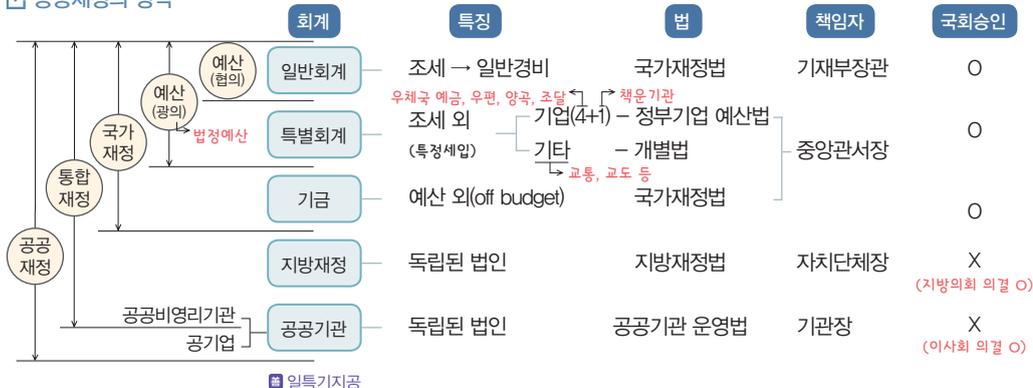
2024 선행정학 p.585

정답 · 해설 답 ④

정부기업(양곡 · 조달 · 우편 · 우체국예금)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

- ☑ ① [×] 「국가재정법」은 순수 공공부문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적용된다.
- ②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회계에 적용된다.
- ③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

☑ 공공재정의 영역



02 중요도 □□□ 난이도 □□□

2014 국가9급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 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②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③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용자지출
- ④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용자지출 - 용자회수

2024 선행정학 p.580

정답 · 해설 답 ③

총지출규모의 개념은 수입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이지만, 지출차원으로 보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용자지출의 합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바로 총지출규모를 의미한다.

☑ 총지출규모

총지출규모	수입측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일특기-내보
	지출측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용자지출	☑ 경자용

01 중요도 ■■■ 난이도 ■■■

2023 국가9급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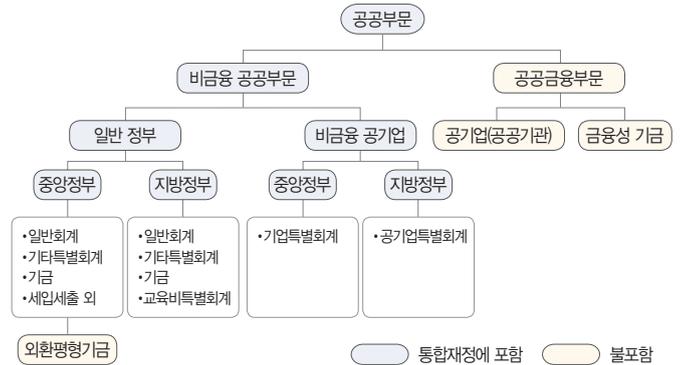
답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 일반정부 부문(정부기관 및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 등)은 모두 포함되지만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부문 전체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통합재정 포함범위가 2001 IMF GFSM(재정통계편람)의 적용으로 회계단위기준에서 일반정부 중심의 제도단위기준으로 변경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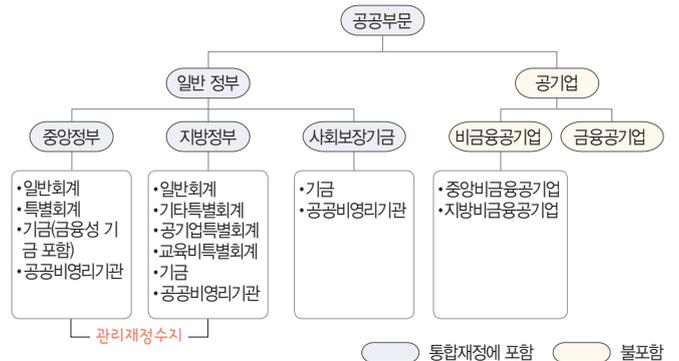
- ☑ ① [○] 세입과 세출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단기적·소모적 계정)와 자본거래(장기적·투자적 계정)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종합적 예산분류체계이다.
- ④ [○] 정부재정 전체의 순수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형식으로 작성된다.

2024 선행정학 p.608

통합재정의 범위(회계단위기준, 1986 IMF GFSM) - 종전



통합재정의 범위(제도단위 기준, 2001 IMF GFSM) - 현재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

구분	1986 GFSM	2001 GFSM
분석단위	회계단위(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통계기록방식	현금주의(현금의 흐름만 포함)	발생주의(자산, 부채의 변동 등 경제적 사건 기록)
포괄 범위	개요	재정책과 무관한 금융활동 제외
	금융성 기금, 외환평형기금	제외
	공공비영리기관	제외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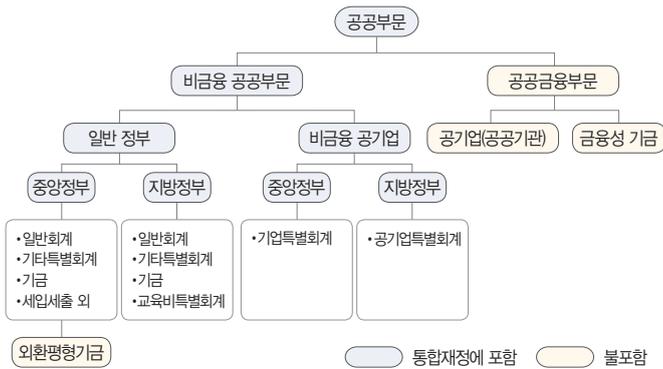
[일반정부 통합재정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 일반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포함(by 2001 IMF GFSM)
- 중앙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불포함(by 「국가재정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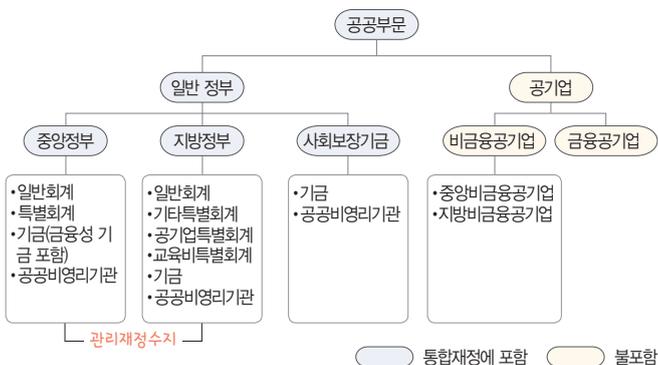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인 재정활동을 위한 회계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용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신속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재원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급부
집행의 자율성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합목적성 차원의 완화된 통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 통일성 원칙 ○	연계 ↳ 통일성 원칙 X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20%(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 심의		

☑ 회계기반 통합재정의 범위(1986 GFSM) - 종래



☑ 통합재정의 범위(제도단위 기초, 2001 IMF GFSM) - 현재



연구 일반정부 통합재정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 원칙 : 통상 "통합재정"이라 하면 일반적(문헌상)으로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을 의미하므로 지방정부, 공공비영리기관은 물론, 금융성기금(8개), 외환평형기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예외 : "중앙정부 통합재정" 또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재정"이라고 제한적으로 언급될 경우에는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 "중앙정부 또는 국가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재정"이라고 하지 않는 한,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접근해야 함 ⇒ 금융성기금(8개),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이 모두 포함됨.

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일반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포함 (by 2001 IMF GFSM)
 중앙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불포함 (by 「국가재정법 시행령」)



● 표시된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 최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주요내용(기구중심) [2023.7.1. 현재]

김영삼 정부 (1993~1997)	① 해양수산부 및 정보통신부 신설 ② 경제기획원 + 재무부 ⇒ 재정경제원 ③ 내무부 지방통제기능 축소	행정쇄신위
김대중 정부 (1998~2002)	❶ 기획예산위원회(1999년 기획예산처로 개편) 및 중앙인사위원회(대통령 소속) 신설 ②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신설 ③ 부총리제 폐지(1998) ⇒ 부활(2001) ④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 차관급으로 격하 ⑤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외청) 신설 ⑥ 여성부 신설 ⑦ 공보처 ⇒ 공보실 ⇒ 국정홍보처	지방이양 추진위
노무현 정부 (2003~2007)	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② 소방방재청 신설	정부혁신지 방분권위
이명박 정부 (2008~2012)	❶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②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 ⇒ 행정안전부 ③ 정보통신부 폐지 ⇒ 방송통신위(대통령 소속) 신설 ④ 국정홍보처 폐지 ⑤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⑥ 복수차관제(8개 부처) 도입 ⑦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다시 격하	지방분권 촉진위
박근혜 정부 (2013~2017)	① 부총리제 및 해양수산부 부활 ②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소속 처(차관급)로 격상 ④ 국민안전처(장관급) 신설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흡수 ⑤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⑥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 ⑦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로 이관	정부 3.0, 지방자치발 전위
문재인 정부 (2017~2022)	❶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②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③ 국민안전처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④ 해양경찰청, 소방청 부활 · 독립 ⑤ 국가보훈처장 직급 상향 조정 : 차관급 ⇒ 장관급 ⑥ 물관리기능 환경부로 일원화 ⑦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민권익위, 개인 정보보호위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화 ⑧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 신설 및 복수차관 제 도입	국민에게 열려있는 혁신 정부, 차치분권위
윤석열 정부 (2022~)	❶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②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	

☞ 최근 역대정부의 주요 행정개혁내용(운영체제 중심)

김영삼 정부	① 총사업비제도(1994)
김대중 정부	① 책임운영기관제도(1999) ②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제(1999) ③ 연봉제(1999) ④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 ⑥ 예비타당성조사제도(1999)
노무현 정부	① 주민투표제(2004) ② 자율편성제도(2005) ③ 주민소송제도(2006) ④ 공무원노조(2006) ⑤ 고위공무원단제도(2006) ⑥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2006) → 법적 의무화(2011) ⑦ 주민소환제도(2007) ⑧ 총액인건비제도(2007) ⑨ 프로그램예산제도(2007)
이명박 정부	① 정부조직 및 공기업 통합합(2008)
박근혜 정부	① 정부3.0(2013)
문재인 정부	① 국민참여예산제도(2018)

36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군무원9급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② 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서비스 전달방식은 수요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이다.



지능형정부는 대개 스마트정부(3.0 전자정부)를 의미하지만 특성을 좀 다르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정리표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선행정학 p.746

2024 선행정학 p.748, 749

정답 · 해설

답 ③

ㄷ, ㄹ만 틀리다.

- ☑ ㄱ [o] 「전자정부법」 제2조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옳바른 지문이다.
- ㄴ [o] 전자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정부내(back office)에서의 효율성을, 대외적으로는 정부밖(front office)에서의 민주성을 행정이념으로 추구한다.
- ㄷ [x]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중앙사무관 장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이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정부전체의 기본계획이 아닌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 장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o] 디지털에산회계시스템(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IT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축소·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x]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와 기업(G2B), 정부와 국민(G2C)과의 관계도 모두 포함된다.

정답 · 해설

답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능형정부(스마트정부) 이전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지능형정부는 디지털 두뇌를 통하여 문제를 자동 인지하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주어 일상툰새를 파고 드는 생애주기별 비서형 정부를 말한다. 생애주기별 비서형정부란 성장, 결혼, 출산, 양육, 은퇴 등 생애단계별로 사용자의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①②④ [o] 모두 지능형 정부의 특징으로 옳은 지문이다.

☑ 전자 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비교

구분	전자정부	지능형정부
행정업무	국민/공무원 문제 제기 → 개선	디지털 두뇌를 통한 문제 자동 인지 → 스스로 대안 제시 → 개선
정책 결정	정부 주도의 정책 운영	국민 주도의 정책 결정
현장 행정	단순업무 처리 중심	복합문제 해결 가능
서비스 목표	양적·효율적 서비스 제공	질적·공감적 서비스 공동생산
서비스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상툰새 + 생애주기별 비서형
전달방식	온라인 + 모바일 채널	수요 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

* 출처 : 명승환 <스마트 전자정부론>

01

중요도 ■■■ 난이도 ■■■□

2012 지방9급 등 총7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2024 선행정학 p.766

정답 · 해설

답 ④

자치사법권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일반적으로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① [○]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수장) 중심(우위)의 기관대립형임
- ② [○] 모든 자치단체는 법인임(「지방자치법」 제3조)
- ③ [○] 주민감사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6), 주민소환제(2007)를 도입 · 실시하고 있음

주의 [특별자치시 안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세종시특별법]
종래(2022.1.13. 이전)	○	×
현재(2022.1.13. 이후)	×	×

주의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지?]

	[자치법]	[제주]	[강원]	[전북]
종래(2023.6.7. 이전)	×	×	○	○
현재(2023.6.7. 이후)	○	×	○	○

원칙 ○, 예외 ×

02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교행9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둔다.
-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024 선행정학 p.774

정답 · 해설

답 ①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시만을 둘 수 있고(「제주특별법」), 특별자치시에도 군과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지방자치법」 및 「세종시법」). 다만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2023.6.7. 시행)으로 특별자치도에는 시와 군을 둘 수 있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두지 않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2023.6.11.)와 전북특별자치도(2024.4.18.)는 두게 된다.

- ☑ ② [○]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③ [○]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 · 면 · 동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 ④ [○]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참고

지방자치법(2023.6.7. 시행)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종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유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 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2021 지방7급 지방자치론

- ① 경합의 원칙
- ② 중복배분의 원칙
- ③ 종합성의 원칙
- ④ 민간참여 최소화 원칙

2024 선행정학 p.772

정답 · 해설 답 ⑤ 유제 ③

보충성의 원칙이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말단 지방정부의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하여 상급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보완하는 것으로 ㄷ, ㅁ만 보충성의 원칙으로 옳은 지문이다.

- ☑ ㄱ [x]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이양 대신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추진원칙 중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ㄴ [x] 먼저 분권조치를 취하고 사후 분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자정능력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방분권 추진원칙 중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에 해당한다.
- ㄷ [o]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 중 적극적 보충성에 해당한다.
- ㄹ [x]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에 해당한다. 보충성과는 관계가 없다.
- ㅁ [o]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 중 소극적 보충성에 해당한다.

☑ 보충성의 원리

소극적 의미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의미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사무배분의 원칙

지방자치법(제11조)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이중배분 금지, 비경합의 원칙 ②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종합처리의 원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9조)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이중배분 금지, 비경합의 원칙 ②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종합처리의 원칙 ④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⑤ 종합성의 원칙 ¹⁾

1) 종합성의 원칙은 「지방분권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은 아니며, 제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2022.1.13. 시행)

내용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자율화	일률적인 기관대립형 ⇨ 기관구성형태(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를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청구연령	19세 ⇨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500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300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3년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화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지방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둬(의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무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 특례는 법률로 정함 ⇨ 지방분권법(부시장 2인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적 설치규정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규정 마련	① 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시·군·구는 15인 이내 ② 당선일로부터 임기 개시후 20일까지 활동 가능	

13

중요도 ■■■ □ 난이도 ■■■ □

2022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라 → 나 → 마 → 다
③ 나 → 라 → 가 → 마 → 다
④ 나 → 라 → 마 → 가 → 다

☞ 2024 선행정학 p.773

정답 · 해설

답 ③

우리나라 역대 지방자치분권추진기구(대통령 직속기구)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김대중 정부 1998~2002)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노무현 정부 2003~2007)
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명박 정부 2008~2012)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박근혜 정부 2013~2016)
다. 자치분권위원회(문재인 정부 2017~2022)

☞ 지방분권추진체계 연혁

정부	근거 법률	추진기구(대통령 소속)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이명박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위원회

03 중요도 ■■■ 난이도 ■■■

2010 지방7급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④ 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유제

다음 기관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6 국회9급(수정) 등 총3회

- ① 경기도 성남시 ② 경상남도 창원시
-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④ 제주도 서귀포시

2024 선행정학 p.801

정답 · 해설

답 ② 유제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단을 두도록 하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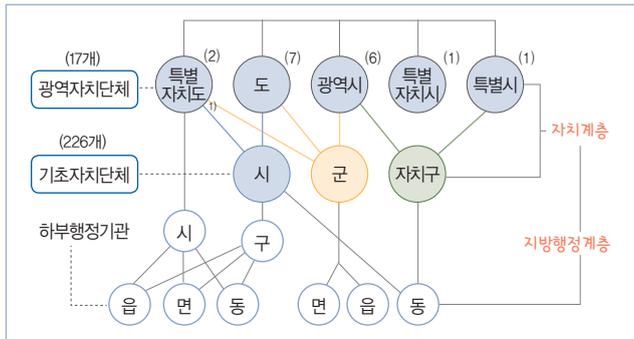
☑ ①③④ [○]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행정 특례로 맞는 지문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특례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 ② 법률안 제출권 및 입법 반영
- ③ 기존의 도와는 다른 법적 지위 인정
- ④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자치시가 아닌 시(행정시)를 동 - 서귀포시, 제주시
- ⑤ 주민권리 확대: 주민투표요건 완화
- ⑥ 주민소환제 도입 및 교육감·교육의원 직접 선거
- ⑦ 인사청문회 실시: 별정직 부지사 및 감사위원장
- ⑧ 인사의 자율성 부여: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 ⑨ 성과중심의 인사 관리: 4급 이상 성과계약제 적용
- ⑩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특례: 도지사 소속 자체감사기구(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도 감사실시 불가)
- ⑪ 자치재정권 강화: 표준세율 확대 인정
- ⑫ 자치경찰단 설치: 도지사 소속, 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자치경무관)
- 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 이관 및 신설 금지
- ⑭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승인없이도 지방채의 **초과 및 외채 발행 가능**

협의 x 승인 x

☑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2023.7.1. 기준)



1) 2023.6.11.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4.18.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설된다.

☑ 「지방자치법」 개정(2023.6.7. 시행)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법인격과 관할)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23.6.7. 개정).
-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 읍,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생략
-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23.6.7. 개정).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24 선행정학 p.820

정답 · 해설

답 ②

병역자원의 관리 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지만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이다.

- ☑ ①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관계 없는 국가사무이므로 의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조례로도 제정할 수 없다.
- ③ [○]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로 의회가 결정하고 단체장이 집행하는 사무이므로 중앙정부의 사전 통제보다 사후통제(합법적 감독, 합목적적 감독)에 주로 의존한다.
- ④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므로 처리를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통제

구분	예	중앙통제		
		예방(사전) 통제	사후적 통제	합법성
고유사무	① 자치단체 존립·유지사무(조례·규칙제정 등) ② 주민복지사무(상하수, 지방소방), 시장, 도서관, 학교, 병원, 도로, 주택,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X	X	○
위임사무	보건소,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직업안정, 하천 유지 보수, 국도 유지보수 등	X	○	○
사무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 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대통령 선거, 병역자원 관리, 천연기념물 관리 등	○	○	○

1) 소방기획 및 예산은 국가사무, 지방소방만 자치단체의 사무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2024 선행정학 p.817, 824

정답 · 해설

답 ③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 배분방식은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포괄적 예시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는 영미 주민자치의 개별적 지정주의 방식을 말한다.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지정)된 사무에 한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 ☑ ① [○] 우리는 의결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 ③ [X]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2021.1.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지금은 틀리다.
- ④ [○] 세무서는 국세청의 일선기관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의 일선기관이다.

주의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공무원
- 자치경찰단 : 제주만 시행 (2006년부터)
- 자치경찰제 : 전국적 시행 (2021.1.1.부터)

→ 시·도 자치경찰위

2024
김종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2024판 1쇄 발행 2023년 7월 3일

지은이 김종규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카스파
출판신고번호 제22-2964호

경영총괄 김종규, 이수영
편집기획 김종규
편집디자인 박재상
편집 박재상
교정 김유빈, 김은선, 노효준, 장유리, 허소정
마케팅 정만규
영업 이용혁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전화 편집문의 : 02-532-5280~1 영업문의 : 02-532-5314
팩스 02-532-5315

이메일 kasp9@hanmail.net
홈페이지 <http://kaspaco.kr>
동영상강의 <http://kaspa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delorean1985>

가격 47,000



김종규
선행정학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처에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판 2023년 7월 3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32-2
ISBN 979-11-92405-31-5 (세트)
값 47,000원 (전3권)

